

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메가 FTA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요약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며 FTA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메가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타결된 TPP는 발효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RCEP, 한중일 FTA는 그동안 양자간 FTA를 통해 축적해온 협상 노하우를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통상정책을 펼쳐 격화되는 양국의 주도권 경쟁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범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미국, EU, ASEAN 등 52개국과 FTA를 타결, 세계 3위 수준의 FTA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¹⁾

1)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 중 11건이 발효되었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뿐이다. 현재도 RCEP, 한중일 FTA, 한-중미 FTA, 한-에라도르 등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RCEP, 한중일 FTA 등 복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는 FTA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찰해보고 아태지역의 메가 FTA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 아시아 경제권의 급부상

과거 통상정책은 미국과 EU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협상의 주무대도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데는 중국 견제²⁾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

다. 주요국들이 앞 다투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배경 역시 아시아 경제권의 급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메가(Mega) FTA 시대의 개막

통상정책이 FTA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산된 지역주의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³⁾ GATT 체제가 출

2)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 중심의 외교·군사정책을 2000년대 이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태지역 내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3) WTO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협상 결과를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정국 간 무역에서 역외 국가들에 제공하지

범한 194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RTA의 수는 612개에 이르고, 이 중 발효 중인 협정은 406개로 확인되고 있다.⁴⁾ 최근에는 지역주의 확산이 소수 국가들의 참여가 아닌 지역간, 대륙간 통합 형태인 메가 FTA의 체결로 나타나고 있는데, TPP와 RCEP을 비롯하여 TTIP⁵⁾, FTAAP 등이 대표적인 메가 FTA에 해당한다.

메가 FTA는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면서 국가별 원산지 조항과 세부 기준 등이 서로 얽히게 되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해 주며⁶⁾, 다수의 양자 FTA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에 글로벌 통상환경이 역내 국가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메가 FTA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메가 FTA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메가 FTA가 단순한 경제 협력관계를 뛰어넘어 정치사회적 협력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新)보호주의 무역 확산

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으나,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면서 통관, 표준, 인증 등 비관세 장벽(NTB: Non-Tariff Barriers)⁷⁾을 통한 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관세를 대신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관세 장벽은 효과측

않는 특혜적 대우를 허용하기 때문에 RTA, FTA 등의 지역주의는 WTO의 비차별 원칙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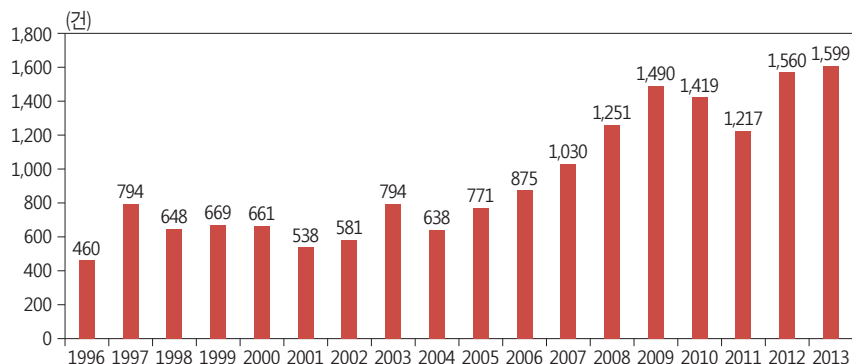
4)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 2015년 10월 1일 열람.

5)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미국과 EU간 FTA로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이번 TPP 타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TTIP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하여 TPP보다 훨씬 크다.

6) 여러 국가가 동시에 FTA를 체결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이 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져 협정 체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락과 닮았다고 하여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도 부른다.

7)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NTB)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GATT는 무역 증대를 위해 케네디라운드를 마무리짓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효과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 TBT 통보건수 추이



자료 : TBT IMS.

정상의 곤란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난이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 타결된 TP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폭넓은 비관세 장벽의 규범을 포함하여 타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3. 아태지역의 메가 FTA 추진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통상이슈는 단연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타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아태지역의 메가 FTA로는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있다. <그림 2>와 같이 TPP, RCEP, 한중일 FTA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각각에 대하여 등장 배경, 진행 상황, 주요국의 입장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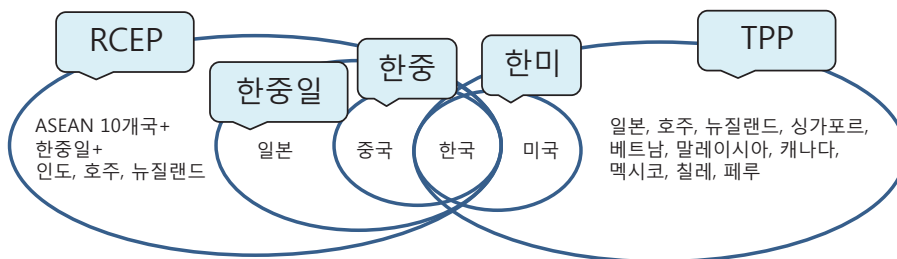
(1)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

진된 메가 FTA로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2006년에 처음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 후 2008년에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는 등 참여국들이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였다.

2015년 10월 5일, TPP 참여국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TPP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협상의 장기표류를 우려해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나흘을 연장하며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만 8,000개가 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비롯하여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해외투자 보호, 국유기업 특혜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2〉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중요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2013.6), p.4.

〈표 1〉 TPP 협상 진행 일지

	내용		내용
2002.10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3개국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 구축 논의	2013.10	정상회의
2005.6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TPSEP 협정 체결	2014.4	미국, 일본 양자 협의
2006.5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TPSEP 협정 발효	2014.7	12개국 대표 회의
2008	미국 참여 표명, TPSEP에서 TPP로 전환	2014.11	정상회의
2009	페루, 호주, 베트남 참가	2015.1	12개국 대표 회의
2010	1~4차 협상, 말레이시아 참가	2015.4	미국, 일본 양자 협의
2011	5~10차 협상	2015.5	12개국 대표 회의
2012	11~15차 협상, 멕시코, 캐나다 참가	2015.8	12개국 대표 회의
2013	16~19차 협상, 일본 참가	2015.10	12개국 대표 회의, 타결

자료 : 신문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각국의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될 경우 인구 약 8억명, 무역규모 9조 693억 달러, GDP 27조 8,428억 달러의 메가 FTA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TPP 가입을 희망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이 합류한다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TPP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타결 선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시장의 중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태지역 내에서 중국에 자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TPP 타결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2006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2008년 WTO DDA가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의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TPP 협상에 매진해왔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⁸⁾에 이어 RCEP까지 성사시킬 경우 아시아 내 미국의 주도권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8)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는 미국,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은행으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이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2014년 아시아 21개국이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2015년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표 2〉 TPP의 경제적 위상

	2000	2005	2010	2013
인구	7억 1,209만	7억 4,640만	7억 8,333만	8억 343만
무역규모 (비중)	-	7조 7,041억 (28.2%)	9조 120억 (26.3%)	9조 693억 (26.5%)
GDP (비중)	17조 2,663억 (51.9%)	21조 420억 (44.7%)	25조 3,898억 (38.8%)	27조 8,428억 (36.5%)

자료 : World Bank,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하였다. 일본은 메가 FTA를 통해 그동안 부진한 성과를 보인 양자 FTA 통상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여타 FTA 타결에 적극적인 우리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TPP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일본의 수출입 가운데 FTA 체결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⁹⁾으로 한국의 41%를 크게 회하고 있으나, 이번 TPP 타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¹⁰⁾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TPP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¹¹⁾ WTO 원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제도에 중국은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²⁾ 사실 TPP 협상은 지적재산권, 노동권, 환경보호, 국영기업 등 비관세분야의 협상 범위가 포괄적이라 정부주도 경제인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 AIIB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정부는 현재 11월에 공개된 TPP 협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정부는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 분야별로 연구해왔다. 현재는 협정문에 입각해서 검토 작업을 추진 중이다. TPP와 관련하여 정부는 가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TPP의 누적 원산지 기준 일괄적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TPP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¹³⁾ 공식절차 측면에서는 통상절차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먼저 마쳐야 하고, 그 후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공식 참여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TPP 공식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먼저 12개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015년 4월에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의 우리나라에 관한 무역장벽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화학물질 평가법, 전기안전기준, 사이버보안 적합성 검증 등을 기술무역장벽으로 지목¹⁵⁾하고 있다. 이

9) 經濟産業省(경제산업성), 「2015年版通商白書」(2015)

10) 日本經濟新聞 신문기사, “メガFTAに追い風日本, TPPテクに”(2015.10.6)

11) 中华人民共和国商務部(중국 상무부) 홈페이지(2014.10.5)

12) 新華通訊, 高虎城(가오후청 상무부장) 인터뷰기사, “高虎城谈TPP: 相信WTO成员不会轻易放弃多边贸易体制”(2015.10.9)

13) TPP, RCEP 등 메가 FTA의 경우 누적원산지 개념이 적용되어 최종 생산제품에 가입국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면 자국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미참여한 국가의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저하된다. TPP에 미가입할 경우 누적원산지에 의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가 TPP 가입국의 부품소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14) news1, “TPP 가입 기정 사실화”에 “아직 때 아닌데” 고민 깊은 산업부, 2015.10.22 <http://news1.kr/articles/?2465001>

15)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미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2015.4.6 www.globalwindow.org/

렇게 제기된 무역장벽들의 해결이 TPP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승인 이후에는 비로소 공식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민감품목들과 민감사항들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협상은 각 회원국과 개별적인 양자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영향분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나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이다.

(2)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RCEP

에도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ASEAN 4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총 7개국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국가들과 칠레, 페루 등 5개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아니므로 RCE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주목할 것은 RCEP 16개국 중에서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9개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고 ASEAN 중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TPP 참여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중국과 인도가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RCEP의 체결에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 실제, TPP가 타결된 이후 RCEP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의 인구는 약 35억 명으로 이는 TPP 참여국의 4배 수준에 해당한다. 무역규모도 10조 6,719억 달러로 TPP의 9조 4,894억 달러보다 다소 높다. GDP의 경우 21조 6,469억 달러 수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2014년 기준). 그러나 TPP 참여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인 것에 반해 RCEP 참여국의 성장률은 7.1%로 당장의 가치는 TPP

〈표 3〉 TPP와 RCEP의 규모 비교

단위 : 명, 달러

	RCEP		TPP	
인구	34억 8,841만	48.7%	8억 1,017만	11.2%
무역규모	10조 6,719억	29.0%	9조 4,894억	25.8%
GDP	21조 6,469억	29.0%	27조 7,189억	37.1%

자료 : IMF IFS.

가 크지만 성장 가능성은 RCEP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CEP은 2012년 11월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현재까지 열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10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9차 협상에서 합의한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 80%를 토대로 개방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10차 협상을 계기로 RCEP은 각국이 구체적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되어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⁶⁾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개최된 RCEP 16개국 정상회의는 10월의 RCEP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면서 RCEP 타결목표를 2016년으로 정하였다. 당초의 타결 목표가 201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년 연기된 것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별 진전이 없다가 TPP가 체결된 이후 시점인 10월 회의에서 협상이 활기를 띠었다는 점에서 2016년은 현실성 있는 목표로 인식된다.

16) 산업통상자원부, RCEP 제10차 협상 막내려(보도자료), 2015.10.13.

TPP 타결 선언 직후 아베 총리는 TPP를 시작으로 RCEP, 나아가 FTAAP¹⁷⁾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하여 거대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RCEP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현재 TPP와 RCEP 양 협상에 동시에 참가하고 있어 두 협상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아태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TPP 타결로 아태지역 내에서 우위를 차지한 만큼 다소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RCEP 1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므로 RCEP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RCEP을 통해 기존 양자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역내의 안정적 교역과 투자를 위한 기반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RCEP은 TPP보다 개방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애초에 RCEP은 미얀마, 캄

17)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APEC의 최종목표로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201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표 4〉 RCEP 협상 진행 일지

	내용		내용
2011.11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4.6	제5차 협상(싱가포르)
2012.11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 선언	2014.12	제6차 협상(인도)
2013.5	제1차 협상(브루나이)	2015.2	제7차 협상(태국)
2013.9	제2차 협상(호주)	2015.6	제8차 협상(일본)
2014.1	제3차 협상(말레이시아)	2015.8	제9차 협상(말레이시아)
2014.3	제4차 협상(중국)	2015.10	제10차 협상(한국)

자료 :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 2015.10.1 열람.

〈표 5〉 세계경제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GDP				수출				수입			
	현황		전망		현황		전망		현황		전망	
	1990	2014	2020	2030	1990	2014	2020	2030	1990	2014	2020	2030
한중일	17,8	21,5	25,2	28,7	11,1	17,7	18,2	18,5	10,3	17,5	18,0	19,2
EU	36,4	29,9	27,2	22,9	52,4	40,8	38,4	34,8	51,5	39,1	37,5	34,2
NAFTA	32,7	27,9	25,0	21,3	18,3	14,6	14,7	14,9	20,4	17,6	16,2	14,8

자료: Global Insight,

보디아 등 개도국 중심으로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들 국가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협상 주도권, 개방 수위를 놓고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자칫 조기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중국 대 ASEAN, 나아가 중국 대 미국으로 비화되면 RCEP 타결은 물 건너 가버릴 수도 있다.

(3) 한중일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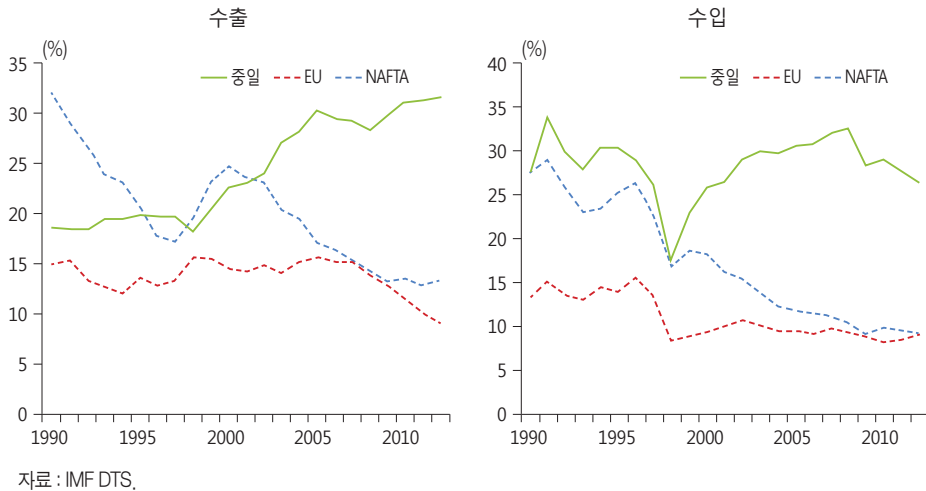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교역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였다. 한중일의 GDP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GDP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28.7%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경제에서 3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표 6〉 한중일 FTA 협상 진행 일지

	내용		내용
2003~2009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	2012.11	협상개시 선언
2010.5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서울)	2013.3	제1차 협상(서울)
2010.9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동경)	2013.7	제2차 협상(상해)
2010.12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웨이하이)	2013.11	제3차 협상(동경)
2011.3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2014.3	제4차 협상(서울)
2011.6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키타큐슈)	2014.9	제5차 협상(북경)
2011.8	산관학 공동연구 제6차 회의(창춘)	2014.11 2015.1	제6차 실무협상(동경) 제6차 수석대표협상
2011.12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평창)	2015.4 2015.5	제7차 실무협상(서울) 제7차 수석대표협상
2011.12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2015.7 2015.9	제8차 실무협상(북경) 제8차 수석대표협상

자료: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 2015.10.1 열람.

〈그림 3〉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비중 추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중국 측의 제안에 따라 2002년 검토를 시작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현재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5년 9월, 제8차 협상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3국간 민감 분야가 엇갈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TPP, RCEP에 비해 한중일 FTA의 협상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국 모두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차협상 때부터 심도 있는 협상 진행을 위해서 수석대표 협상과 실무 협상을 분리하여 개최하는 등 FTA 타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EU, NAFTA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중국, 일본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필요한 입장이다.

TPP, TTIP 등 미국이 주요 협정을 주도함에 따라 중국은 RCEP, 한중일 FTA 등 여타 협정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에 다소 부진한 수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자 첨단기술 보유국인 만큼 중국의 기술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한중 FTA 타결에 의한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선점효과를 견제하고자 향후 진행되는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번 TPP 타결로 아태지역 내에서 우위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3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한중일 FTA는 3국간 과거사, 영토문제를 비롯한 역내 주도권 경쟁 등 불안정 요인을 불식시키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TPP, RCEP과 별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야 할 FTA라고 할 수 있다.

최근 RCEP이 상품 1차 양허 모델리티를 타결



하는 등 협상에 진전을 보임에 따라 한중일 FTA 협상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RCEP 협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한중일 FTA도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현

재 RCEP이 한중일 FTA보다 타결 가능성이 높아 TPP, RCEP에 포함된 내용을 한중일 FTA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시사점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상질서의 재편 추세에 맞추어 양자간 FTA 체결에 역점을 두는 통상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메가 FTA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기체결한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커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메가 FTA 협상에 대비

하여 오랜 기간 축적해온 FTA 협상 노하우를 재 점검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략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RCEP과 한중일 FTA에서 자유화 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두 FTA 모두 낮은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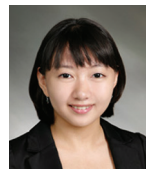
문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자유화 수준이 높은 통상정책을 펼쳐온 만큼 기체결 FTA와 일관성 있게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RCEP, 한중일 FTA를 연계하여 각 협정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RCEP, 한중일 FTA의 타결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신축적인 상황 대처가 절대 중요하다. TPP의 경우 각국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발효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정부

는 가입 시기를 미리 발표하여 우리의 대응을 스스로 경직적으로 만드는 자승자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신, 향후 진행 상황 및 국내외 여건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로 판단할 때 가입선언을 하는 신축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태지역에서 최근 전개되는 메가 FTA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통상정책을 펼침으로써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모토로 내세우듯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입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한정민

산업·통상분석실·연구원
jmhan@kiet.re.kr / 044-287-3291

〈주요 저서〉

- FTA·통상정책의 대국민 소통강화 및 홍보전략 수립방안(2014, 공저)
- TPP 추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2014, 공저)